

2025학년도 모의논술

# 논술시험(언어 논술)

##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답안작성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시험 (언어 논술)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세계화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 <제시문 1>

1990년도 초반, '세계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이는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을 위한 시장의 국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세계화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세계화가 상품과 자본 그리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세상은 더욱 부유해지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세계화에 적극 동참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소득도 함께 증가하여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였다. 산업화와 무역으로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보건 위생 시설이 개선되고, 빈곤의 해결로 사람들의 기본 수명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삶의 조건도 좋아졌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변화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는 시장의 특징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은 특별하고 다르게 태어난다. 그리고 시장은 이러한 개인의 특징을 인정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시장은 주어진 환경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냉정하게 탈락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원칙은 냉정하면서도 공정하다. 물론 공정한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경쟁이 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가 중요하다. 만약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세계화와 불공정한 시장 체제 때문에 악화되었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분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시장 체제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시장 개입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규제와 적합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점을 조금 바꾸어, 세계화를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세계화는 곧 세계를 한 울타리로 인류 공동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며 이는 단순한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나라나 민족의 특징이나 차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숭상해야 한다. 여러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국경 장벽을 철폐하는 데 골몰하는 사이,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피해를 흡수하지 못하며 세계화의 확장을 가로막는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것도 사실이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의 가능성은 증가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 세계화에 있어 국가마다 다른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2016년에 발표된 세계화에 대한 주요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들은 그리스와 미국뿐이었고 네덜란드나 스웨덴,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와 스페인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모두가 세계화 타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놀라울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파격적이지만은 않다. 국가마다 차별된 문화와 언어가 있고 아직도 사람과 물건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데 여전히 다양한 규제와 문화 장벽에 부딪힌다. 이러한 장벽들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한 세계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특정 계층이나 부류에 국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화가 보편적이지 않다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근원은 상당 부분 세계화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제시문 2>

개발과 저개발이란 단어는 종종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하향식 접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각국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원주민을 공략하는 개발 패러다임을 '개발침략'이라고 부른다. 이 패러다임은 대부분 지속적인 상품의 소비 증가에 근거한 산업화 사회와 시장을 도모한다. 이처럼 '개발침략'으로 규정되는 세계화 패러다임은 원주민의 땅, 천연자원, 생계를 잃게 만들고, 그들의 전통적 지식을 훔치거나 도용해서 특허를 내고, 사회에 갈등을 유발하여 공동체를 위협하고, 개발의 혜택을 원주민들과 나누지 않고, 원주민들을 강제로 동화시켜 그들의 문화를 잃게 만들고, 원주민들을 차별하고, 뒤처지게 만들고, 극단적 빈곤에 빠지게 한다. 세계화는 대체로 개발 패러다임에 따른 상품, 서비스, 노동의 경제적 세계화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이 세계화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 논술시험 (언어 논술)

수단들은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도 못했다. 다행히 인종차별 철폐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국제협약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 기준을 제공해 왔다. 왜 이러한 기준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기준들이 정립되지 않았더라면 개발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는 세계화 논쟁에서 여전히 자주 간과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국제무역 협상들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공정무역의 준거를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협상들은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받아들일도록 강요했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약소국 국민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했고 자원의 불공정 배분에 대해서도 달리 손을 쓸 힘이 없었다. 세계화의 주역인 첨단기술산업 분야 이외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상대적 불평등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세계화가 초래한 불균형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이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반영한다. 세계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불균형이 단지 운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다른 문제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불균형보다 경제 효율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사회정의, 환경, 문화적 다양성, 취약계층 보호,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도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국제인권규약의 제1조는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규범에서의 인권이라는 준거에 따르자면 세계화 과정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은 모든 사회와 경제를 동질의 단일체로 만들어 버리는 1차원적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경제적·사회적 동질화를 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화가 한계에 봉착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세계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발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역시 인류에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 <제시문 3>

세계화를 엘리트 계층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세계화가 부유층에 막대한 부를 안겨줬지만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세계화의 유령이 또 다른 유령을 낳는다. 그러나 세계화 덕에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빈곤 인구는 10억 명 이상 줄었다. 인도, 중국, 베트남, 한국, 멕시코 등에서 빈곤을 벗어난 이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본 경우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혜택을 누렸다. 스마트폰에서 의류, 장난감까지 다양한 재화의 값이 싸진 덕이다.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일부 미국인들의 요구는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일자리가 유출된다는 주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중국인이거나 멕시코인이 아닌 자동화 기술(로봇)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는 중에도 생산량은 계속 상승했다.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 확대에 불을 지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저주받기보다 환영받아야 할 현상이다. 불평등을 환영할지는 불평등이 어떻게 초래됐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를 살펴 결정된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이는 제조업, 사무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혜택을 입었다. 물론 모두가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중 하나다. 소득 불평등의 이러한 측면을 인정하지 못하면 발전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선진국에서도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다. 시장의 범위가 국내에서 세계 전체로 확대된 덕이다. 재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 자산을 늘려갈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과 재능을 나누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 범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부의 창출이다. 환영받지 못할 불평등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부를 얻고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행태에서 비롯되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을 무섭게 만드는 원인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이용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구슬리는 것이 전형적인 예다. 농업 기업들은 매년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얻어낸다. 제약회사들은 로비를 통해 약값을 올리거나 기준에 있는 상품의 특허권을 연장하려 한다. 부동산 대기업들은 그들의 편의에 잘 맞춰진 세법을 교묘히 이용한다. 이런 행위들은 경제성장을 늦춤으로써 경제에 해를 끼친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합법화된 도둑질’이라면, 혁신과 창의성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늘 새치기를 통해 자신을 앞서가는 이들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화될 수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인종 특혜에 물들어 있는 백인들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반발해 분노할 때다. 정당화되는 경우는 일부 특별 집단에만 부를 몰아주는 정부에 대해 분노할 때다. 성장은 세계화와 합법적인 불평등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불평등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세계화와 불평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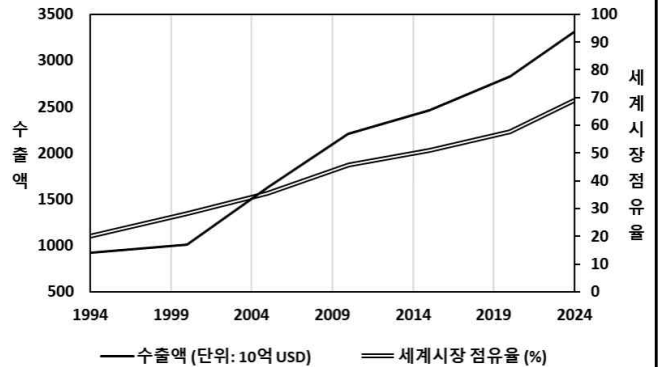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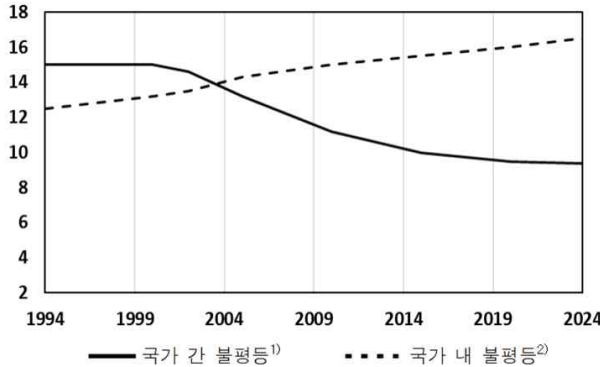
#### <제시문 4>

세계화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결같이 세계화를 두둔하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은 이제 대중의 신임을 잃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화에 열광하면서도 그에 동반되는 다양한 측면들의 섬세한 차이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경제 개념도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경제적 프로세스들을 뭉뚱그려 놓은 것일 뿐, 그 프로세스들이 전부 건전한 것도 아니며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공통의 효과를 산출할 개연성도 거의 없다. 우리는 이제 세계화에 대해 균형 있는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점은 세계화와 문명 충돌의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은 서구 문화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서구, 특히 미국의 신념을 뒤흔든다. 서구 문화가 보편타당하다는 신념은 서술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서술적 차원에서는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관습을 채택하기를 원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당위적 차원에서, 서구 보편주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구의 가치관과 제도, 생활양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이것들이 인류의 가장 수준 높고 가장 계몽되고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문명화된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서구인들이 서구의 가치관, 제도, 문화를 채택해야 한다는 믿음이 비도덕적인 까닭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문화는 힘을 뒤따른다. 따라서 비서구 사회들이 서구 문화에 침윤 당한다는 것은 서구의 힘이 확산되고 팽창하여 비서구 사회에 충격을 가했음을 의미한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는 보편주의의 필연적이며 논리적인 귀결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명의 완숙기로 올라선 서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회들에 강요할 만한 경제적 저력도 인구 배경도 없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결과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가치관에 위배되기도 한다. 만약 아시아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자신들 문화의 보편타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서구인들은 보편주의와 제국주의의 연관관계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명은 출현, 상승, 쇠락의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 서구가 다른 문명들과 다른 점은 문명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 남다른 가치관과 제도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 다윈주의, 개인주의, 법치주의가 포함된다. 서구는 이런 자산을 활용해서 근대성을 창안하고 전 세계로 팽창하면서 다른 문명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런 특성들의 조화는 서구만의 것이다. 북미와 유럽을 포괄하는 서구사회는 개인적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문화적 자유라는 관념의 원천, 그것도 아주 독특한 원천이다. 이것들은 서구 사상이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사상은 아니다. 서구 문명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이어서가 아니라 독특하기 때문이다.

# 논술시험 (언어 논술)

[문제 2]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세계 160개국의 자료를 근거로 도출한 지난 30년간의 세계지표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 1>과, 같은 기간 A국과 B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2>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40점)

<자료 1> 지난 30년간 세계지표 추이 (1994년 ~ 2024년)



<자료 1-1> 소득 불평등

<자료 1-2> 첨단산업분야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 실적

- 주1) 국가 간 불평등은 160개국 중 하위 50% 국가 대비 상위 10% 국가의 평균 소득 비율로 산출
- 주2) 국가 내 불평등은 개별 국가 내 하위 50% 대비 상위 10%의 평균소득 비율을 160개국 평균 값으로 산출

<자료 2> 지난 30년간 A국과 B국의 사회·경제지표 변화 (1994년 ~ 2024년)<sup>3)</sup>

주3) 두 국가는 모두 국제무역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자료에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 지표                                 | 1994   |        | 2024    |         |
|------------------------------------|--------|--------|---------|---------|
|                                    | A국     | B국     | A국      | B국      |
| 국민총소득(단위: 100만 USD)                | 98,348 | 97,916 | 193,689 | 467,137 |
| 인권보장 관련 신규 법안 발의 수(연간)             | 13     | 14     | 16      | 40      |
| 도로 보급 수준 <sup>4)</sup>             | 1.11   | 1.23   | 1.58    | 3.12    |
| 1인당 수입식품 소비량(단위: kg)               | 27     | 28     | 56      | 298     |
| 수입식품 항공 수송 총 거리 <sup>5)</sup>      | 218    | 247    | 572     | 4,081   |
| 영아사망률 <sup>6)</sup>                | 5.4    | 5.3    | 4.9     | 2.4     |
| 언어위기지수 <sup>7)</sup>               | 25     | 26     | 25      | 65      |
| 첨단기술 대외의존도 <sup>8)</sup>           | 0.36   | 0.35   | 0.41    | 0.83    |
| 첨단산업분야 기술무역수지비 <sup>9)</sup>       | 0.96   | 0.97   | 0.97    | 0.54    |
| 중심도시 면적 대비 인구집중도(%) <sup>10)</sup> | 18.8   | 18.2   | 20.0    | 35.1    |

- 주4) 국토면적 및 인구를 고려한 도로 보급 수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도로 보급 수준이 높음
- 주5) 생산지에서 해당 국가까지 항공편으로 수입된 식품의 총 거리는 수송량(ton) x 수송거리(km)로 산출함
- 주6) 영아사망률 = (연간 영아 사망자 수/연간 출생아 수) x 1000
- 주7) 자국의 고유 언어가 소멸위기에 처한 정도를 1~100 사이의 값으로 평가한 지표 (100에 가까울수록 소멸위험이 높음)
- 주8) 첨단기술의 외국인 특허등록건수 / 첨단기술의 내국인 특허등록건수
- 주9) 첨단산업분야 기술수출액 / 기술도입액
- 주10) 전국 대비 중심도시의 인구집중도를 전국 대비 중심도시 면적집중도를 고려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

[문제 3] C국 정부는 자국 첨단기술의 우위 강화와 자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 제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방안에 대해 본인은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